

'90학년도 대학 등록금 策定過程 및 結果 분석

- ◇ 이 研究論文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 1990년도 自體 ◇
- ◇ 研究의 일환으로 李鍾昇 교수(忠南大·연구 책임자) 등에 ◇
- ◇ 의하여 수행된 것이다. 紙面 관계상 目次와 要約 및 提言 ◇
- ◇ 등 주요 부분만을 발췌하여 게재한다.〈편집자 주〉 ◇

1. 目 次

I. 서 론

II. '90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분석

1.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의 개요
2. 대학 등록금 책정 설문조사 결과

III. 대학 등록금 책정의 사례

1. 국·공립대학
2. 사립대학

IV. '90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결과 분석

1. 국립대학 기성회비 책정 결과
 - 가. 국립대학 학부 기성회비 책정 결과
 - 나. 국립대학 대학원기성회비 책정결과
2.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 결과
 - 가. 사립대학 학부 등록금 책정 결과
 - 나. 사립대학 대학원 등록금 책정 결과

V. 요약 및 제언

1. '90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책정 과정
2. '90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책정 결과
3. 대학 등록금 책정을 위한 제언

〈附 錄〉

1. '90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질문지
2. '90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3. '90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현황
 - 1) '90학년도 국립대학 학부 등록금 책정 현황
 - 2) '90학년도 국립대학 대학원 등록금 책정 현황
 - 3) '90학년도 사립대학 학부 등록금 책정 현황
 - 4) '90학년도 사립대학 대학원 등록금 책정 현황
4. 교육지표에 따른 등록금의 연동적 산출 모형
 - 1) 교육지표에 따른 국립대학 기성회비의 연동적 산출 모형
 - 2) 교육지표에 따른 사립대학 등록금의 연동적 산출 모형

책정 과정은 대체로 대학에 따라 0~31.7%의 인상을 격차를 보이면서 끝맺음하였다.

2. 要約 및 提言

1) '90 學年度 大學登錄金 策定過程

정부는 지난 '88년 9월초 중앙교육심의회 고등교육분과의 의결을 거쳐 그동안 매년 통제하여 오던 국립대 기성회비와 사립대 등록금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89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 간의 자율적인 협의·조정과정을 거쳐 책정하도록 정식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였다. '89학년도 등록금 책정 과정은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해야 하는 우리 대학들에 많은 교훈을 주었다. 첫째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인상 요인에 근거하여 등록금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90학년도 등록금 책정 과정은 전년도의 경험을 거울 삼아 원만하게 타결된 대학이 많았다. 이는 대체로 대학의 자체적인 자원 확보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년도의 대학 재정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등록금 인상을 하여 그로 인한 재정 적자가 누적되자 금년에는 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대학들이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등록금 인상 요인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을 통하여 등록금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저항과 반발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본 협의회가 125개 대학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그중 77개교로부터 응답을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7개교의 14.3%에 해당하는 11개교만이 학생들과의 협의 없이 학교 측에서 등록금을 책정하였고, 나머지 66개교는 어떠한 형식이든 학생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중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과의 계속적인 협의 끝에 결국에는 결렬되어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진통을 겪은 경우도 있으나,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킨 것은 사실이다. '90학년도 등록금

2) '90 學年度 大學登錄金 策定 結果

국립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동결하였으므로 주로 기성회비를 중심으로 책정 경과를 분석했지만,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합계를 함께 통보한 대학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의 책정 현황도 분석하였다.

'90학년도 국립대학 기성회비 책정 결과를 '89학년도와 비교해 보면 뒤의 <표 1>과 같다. 대체로 '89년보다는 '90년의 기성회비 수준과 인상율이 높다. 특히 '90년의 계열별 등록금 차이도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계열간 기성회비의 차이가 작년보다 커졌음을 알 수 있다.

'90학년도 국립대학 대학원의 계열별 기성회비 평균액 및 인상율을 보면 일부 야간계 학과와 일부 특수대학원을 제외하고는 학부·석사·박사 과정의 기성회비 및 수업료가 동일하다. 다만 본 보고서의 대학원 기성회비 분석결과가 학부와 다른 것은 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이 있어서 그 평균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입학금도 학부와 마찬가지로 '89년의 8.4만원으로 동결되었는데, 다만 공학·예능 계열의 경우 평균 0.2%가 인상되었다. 이것은 금오공대가 '90학년도부터 국립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입학금을 국립대학 수준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대학원의 경우도 석·박사 과정 공히 전 계열에서 5.7~7.9%의 기성회비 인상이 있었다.

기성회비 인상율별 대학 수를 살펴 보아도 대부분 5.0~9.9%의 인상율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공학·예능 계열의 경우 15.0% 이상 인상된 대학이 1개교 있는데, 이 역시 입학금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 때문이다.

'90학년도 사립대학 등록금은 거의 모든 계열과 학년에서 10% 이상 인상되었다. 이는 전년도의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소요 재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학 재정 적자 현상이 누적되어 금년도에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80년대 들어 거의 인상되지 않

〈표 1〉 '89 학년도 대 '90 학년도 국립대학 기성회비 비교

연 도	계 열 별	제 학 생 평 균			전 체 평 균		
		기성회비 (천원)	인상율 (%)	등록금 차이도	기성회비 (천원)	인상율 (%)	등록금 차이도
'89	인문·사회	539	2.0	1.000	540	2.0	1.000
	이학·체육	667	1.3	1.237	671	1.7	1.243
	공학·예능	691	1.5	1.282	700	1.8	1.296
	약학	695	2.2	1.289	701	1.9	1.298
	의·치학	678	-3.8	1.258	677	-6.6	1.254
'90	인문·사회	584	6.3	1.000	585	6.2	1.000
	이학·체육	720	6.1	1.233	723	5.9	1.236
	공학·예능	764	6.0	1.308	768	5.7	1.313
	약학	772	6.4	1.322	772	6.4	1.320
	의·치학	794	9.4	1.360	782	9.1	1.337

*주: 계열에 따라 표에 나와 있는 '89년도 기성회비와 '90년도 기성회비란 기준으로 산출한 인상율이 도 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인상율과 차이가 나는 것은 '89년과 '90년에 각각 기성회비 책정 결과를 알려 온 대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료: 1989학년도의 기성회비 책정 결과는 이종재 외, 「대학의 자율과 등록금 책정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p.178을 참고함.

있던 입학금은 작년에 이어 금년도도 큰 폭으로 인상되어 대체로 평균 20% 이상의 인상율을 보였으며, 대다수의 대학들이 15% 이상 인상하였다.

'90학년도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 결과를 '89학년도와 비교해 보면 뒤의 〈표 2〉와 같다. 사립대학 등록금도 국립대학 기성회비와 마찬가지로 '89년보다는 '90년의 등록금 수준과 인상율이 높다. 또한 등록금 차이도에 있어서도 '89년과 '90년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비의 수혜 정도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록금에 대한 계열별 교육비 차이도의 적용'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大學登錄金 策定을 위한 提言

정부의 대학 등록금 책정의 자율화 방침은 중대 정부가 행정 통제 과정에서 적용해 온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自律化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등록금 인상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는 것과는 다른 명실상부한 자율화 조치였다고 보여진다. 돌이켜 보건대 그동안 타율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율을 통보받아 대학 등록금을 정하고 이에 따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해 오던 우리

나라 대학들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대학 등록금의 자율화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89학년도 등록금의 책정 과정에서 각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원장 지침과 등록금 인상안에 따라 '89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공지하였으나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과 이로 인한 학내 소요를 겪는 과정에서 등록금 인상을 하향 조정·결정하였으며, 많은 대학들에서는 등록금을 동결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89학년도 2학기가 지나서야 등록금 수준을 결정한 대학이 있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되었다.

'90학년도의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도 '89학년도보다 정도는 덜하였지만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설문에 응답한 74개교 중 '90년 2월 이후에야 등록금 책정을 완료한 대학이 49개교로서 전체의 66.2%나 되었으며, 신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등록금의 책정을 완료하지 못한 대학도 10개교로서 13.5%나 되었다. 등록금의 책정은 최소한 신학기가 시작되기 2~3개월 전에는 완료되어야 재정 운영 및 투자 계획 등 대학내의 제반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90학년도 등록금 책정 과정상의 진통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표 2〉 '89 학년도 대 '90 학년도 사립대학 등록금 비교

연 도	계 열 별	제 학 생 평 균			전 체 평 균		
		등록금 (천원)	인상율 (%)	등록금 차이도	등록금 (천원)	인상율 (%)	등록금 차이도
'89	인문·사회	1265	2.6	1.060	1314	4.5	1.000
	이학·체육	1366	3.0	1.080	1433	5.4	1.091
	공학·예능	1403	3.1	1.109	1485	5.7	1.130
	약학	1501	3.7	1.187	1590	6.4	1.210
	의·치학	1672	1.7	1.322	1733	2.5	1.319
'90	인문·사회	1423	10.8	1.000	1476	11.0	1.000
	이학·체육	1584	11.4	1.113	1653	11.7	1.120
	공학·예능	1669	12.6	1.173	1752	13.1	1.187
	약학	1787	12.7	1.256	1880	13.6	1.274
	의·치학	1906	11.3	1.339	1960	11.4	1.328

*주: 계열에 따라 표에 나와 있는 '89년도 등록금과 '90년도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상율이 도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인상율과 차이가 나는 것은 '89년과 '90년에 각각 등록금 책정 결과를 알려온 대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료: 1989학년도의 등록금 책정 결과는 이종재 외, 「대학의 자율과 등록금 책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p.178을 참고함.

등록금 책정의 자율화가 시작된 이후 '89년과 '90년의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대학들이 진통을 겪게 되자 심지어는 '88년 이전의 상태, 즉 타율적인 등록금 책정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원하는 대학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향후의 대학 등록금 책정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 등록금 책정의 자율화 조치를 후퇴시켜 과거처럼 타율적인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결국 동일 유형·동일 지역 대학간 협의의 과정을 거치든, 다른 대학의 등록금 책정 결과를 참고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던 간에 등록금 책정에 따른 책임과 합리적 설명의 책임은 결국 개별 대학이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89학년도와 '90학년도의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상의 경험을 거울 삼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 등록금 책정의 자율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그리고 학생·교수·직원 등의 대학 구성 집단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정부대로 등록금 책정의 자율화를 위한 원칙을 더욱 확고히 세우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서는 대학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는 사립대학들, 특히 영세 사립대학들에 대한 국고 보조가 질실하다.

그러나 사립대학 스스로가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정부의 재정 지원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의 경비 증가 요인을 가급적 자제하고 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을 위해서 재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또한 등록금 인상의 합리적인 근거와 장기 발전계획을 정립하여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학교의 발전을 통하여 질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학생들 스스로도 비용을 더 부담하겠다는 자오를 세로이 해야 할 것이다.

향후의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들이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① 대학 등록금의 책정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책정 과정에 학생이나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② 대학 교육비의 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건비, 학생 경비, 연구비, 실험 실습비, 내부 시설비 등의 산출 및 소요 근거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과별

소요 경비가 과학적으로 연구·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③ 대학 등록금은 그 인상분만큼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되어야 하며, 인상된 등록금이 재단의 재산 증식에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

④ 대학 등록금의 자율화는 단순히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사회, 총·학장의 대표성 확보, 학생이 참여하는 예산·결산 심의기구 구성 등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이 같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국립대학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 사용에 어긋난다. 따라서 사립대학에도 국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⑥ 시설 투자비는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동안만이라도 한정적으로 등록금을 통한 예산에 반영하되, 학생 납입금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등록금 책정시 문교부가 제시하는 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준수하도록 한다. 그러나 계열별 차이도 적용은 1학년에만 적용하여 계열간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을 순연할 필요가 있다.

⑧ 학비 감면율의 산정에는 외부 장학금을 제외하며, 3·4학년은 기존의 비율(20%)을 준수하고, 1·2학년은 10% 이내로 줄이도록 한다.

⑨ 신규 외곽 시설 사업비를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비율은 입학금을 포함하여 10% 이내로 한다.

이상의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대학은 이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89학년도와 '90학년도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의 진통은 이러한 점에서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지향하는 귀중한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각 대학은 등록금의 자율적 책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대학은 스스로의 사정과 발전 과제를 고려하여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을 제시하고, 대학구성원에게 이것을 책임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합리성을 토대로 하여 대학 내에 합의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점차로

자율화를 지향해 가면서 다양한 대학 구성원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 등록금 책정은 진통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둘째,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과 이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견해가 표명되고 의견이 조정되어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견해가 투쟁의 형식이나 학내 대자보에 표명되고 직원들의 입장이 노조의 투쟁 구호로 나오기 앞서서 학교의 사정을 '부분 이해'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의 입장으로 보면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場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등록금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학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등록금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방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 문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대학 나름으로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등록금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될 수 없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심의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구성 범위도 대학, 교수, 학생, 교직원 그리고 동문과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여기에서 의견이 조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학에 따라서는 아무리 설득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도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므로 학교는 학생들의 소위 '투쟁 일정'에 따라 계속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과연 학생들과의 대화가 필요한지가 의문시된다고 보는 대학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등록금 조정 위원회'를 통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생회 대표들은 이해하는 듯하면서도 등록금 동결 투쟁에 대한 다른 대학과의 연계성, 등록금 동결 투쟁을 통한 총학생회의 대중성 확보와 조직력 강화 등에 등록금 문제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문제와 결부하여 대정부 투쟁에까지 발전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대화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대화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 조직을 통하여 학생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칠 때 학교 측으로서는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근거와 어느 정도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으로써 학생들의 주장에 이끌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의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는 대학 구성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학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학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의 소지가 있게 마련이다. 대학의 제정을 공개할 때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 집행의 장부까지 심사 대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대학에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부 공개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서와 결산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이 등록금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때 본 협의회에서 제안한 바 있는 '교육지표에 따른 등록금(기성회비) 연동적 산출방식'(<부록Ⅳ> 참조)은 유용한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모형은 대학 발전을 위한 목표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대학 등록금 수준이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을 통하여 등록금 수준 결정을 위한 협의·조정 과정에서 논의의 합리성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향후의 등록금 책정에서는 전년도에 해당 학생이 썼던 등록금을 기준으로 인상율을 산정하는 원칙을 확고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에 따른 경우, 전년도에 학생이 썼던 등록금을 다음 학년도에도 똑같이 낸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학년이 올라 갈수록 등록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의 등록금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등록금 책정 과정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결과 몇몇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의 의미를 놓고 대학과 학생 간에 '동결이다' 혹은 '인상이다'라는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입의 증가가 있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학생이 썼던 등록금의 액수와 같기 때문에 동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학생들은 동일 학년의 등록금이 전년도와 금년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학 등록금을 보는 관점에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4년 간의 대학교육 서비스에 대한 증체적 수수료 지불의 계약금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교육비의 변동에 따라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입장으로서 통상적인 등록금의 개념이 여기에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학에 지원·입학했을 경우에는 이미 4년 동안 그 대학이 제공하려는 교육을 이 정도의 등록금을 내고 받겠다는 묵시적 약속과 계약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4년 교육 기간 동안 입학 당시에 썼던 등록금에 교육비의 증감 요인을 적용하여 재학생의 등록금을 책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후자의 입장은 일종의 계약금이기 때문에 연도별 교육비의 증감 요인과는 무관하게 4년 동안 계약 당시 수준의 등록금만 징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교육비 인상 요인에 따른 계약금의 인상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 학생이 입학할 당시의 등록금을 계약금으로 본다면 그에 대해 매년 인상 요인을 적용하여 등록금을 책정하게 되고, 결국 학년 기준보다는 학생 기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실체를 보더라도 1학년의 교육비보다는 고학년의 교육비가 더 많이 들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전공 과목의 비중이 커지면서 과목당 인원은 감소하기 때문에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 특히 고학년의 경우에 높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의 여건 개선에 따른 비용 증가에 따라 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혜자의 수수료 개념으로 등록금의 개념을 본다고 하더라도 학생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높은 등록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